미래를 바꾸는 힘, 규제혁신

지역경제를 더 활력있게!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소개 –

행정안전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드론, 3D 프린터 등 미래형 신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

신체이식 대상을 손·팔로 확대 했어요

Q 신장, 간장, 폐 등의 신체이식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데, 손 · 팔 이식은 왜 적용이 안 되나요?

대구광역시는 팔이식 수술을 대표 의료기술로 육성했지만,
관련 법령에 '팔 이식'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손·팔이 장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전국 7,000여 명의 상지절단장애 1·2급 대상자들이 의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년 8월 시행)

[전라북도 전주시]

드론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제 도입했어요

Q 야간에는 반짝이는 드론 예술공연을 볼 수 없나요?

전주시에서는 드론을 레저·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려던 중,
관련 법령에서 드론의 야간비행을 금지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드론의 야간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드론예술 콘텐츠 분야가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11월 시행)

[울산광역시]

글로벌 3D프린팅 허브 도시 완성했어요

Q 3D프린팅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선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해요!

울산광역시는 3D프린팅 허브 도시를 조성하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기획·조정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꼭 필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D 프린팅 관련기업 유치 등 3D프린팅 허브도시 조성으로
지역소득 1,151억 원 증가와 **약 3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년 5월)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2017년 12월)

[강원도 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했어요

Q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달라요!

태양광 발전시설과 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이 미비하고 지자체 간 주거밀집지역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도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횡성군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기준·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허가기준 등이 마련되었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년 6월 시행)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공장의 캐노피, 작두콩 등 중소기업 · 농촌 지원을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캐노피 설치기준 완화로 공간 활용 최대화했어요

Q 공장 증·개축의 설치기준이 한옥, 축사보다 더 까다로워요.

「건축법」상 공장 등의 건축물에 1m를 초과한 캐노피를 설치하면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고 있어, 공장 증·개축의 제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충주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공장 등 건축물의 건폐율 제외 기준 완화를 건의하여, **창고 등의 캐노피는 3m에서 6m까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장의 공간 활용 극대화와 **캐노피 시공업계의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1월 시행)

[전라남도 화순군]

작두콩 꼬투리 산업이 활력을 되찾았어요

Q 작두콩 꼬투리 산업이 활력을 되찾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두콩 꼬투리가 식품원료에서 제외되어 화순군 대표 특산물인
작두콩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화순군은 작두콩 꼬투리 이용 실태 자료 수집, 독성이 없는 어린 꼬투리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어린 작두콩 꼬투리가 식품원료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 작두콩 생산으로 화순군은 **전국 최고의
작두콩 산업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17년 12월 시행)

[부산광역시]

대형 부품 수송 기업의 고충을 해소했어요

Q 해상 풍력부품이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운송차량의 운행 제한, 기준도 일부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풍력발전 대형 부품 수송 기업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물류비용 등 증가로 고충이 있었으며, 풍력발전 부품 업계는 물류차질로 시장축소 위기가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강서경찰서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풍력발전 대형 부품의 운송허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원활한 물류 흐름으로 **운송업계의 비용부담 감소**, 풍력발전 부품 업계의 **신규 고용(500명) 창출 등으로 풍력발전 부품 업계의 영업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경찰서 등, 운송허가 요건(운송시간대, 너비) 변경(2018년 1월 시행)

[인천광역시]

경인아라뱃길 물류센터에 외국 투자기업 호텔을 짓게 됐어요

Q 「건축법」에서의 '도로사선제한 규제'는 이미 폐지된 것 아닌가요?

외국투자기업 W회사는 경인아라뱃길 인천물류센터 내에
P호텔 신축을 추진했지만, 「건축법」에서의 '도로사선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바람에
호텔 신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검토, 도로사선제한 적용 배제가 타당하다는 점을 관할 구청과 적극 협업·해결하여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호텔 공사 진행으로 **일자리 창출(500여 명)**과 **외국자본 투자유치(약 1,000억 원)** **경인아라뱃길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법」 제60조제2항 적용에 대한 재검토 및 건축 허가(2017년 9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했어요

Q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는 없나요?

의정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획기적인 도시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는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기간 단축과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규모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4만 명),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2017년 8월)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개발사업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요

Q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서 경미한 변경사항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모두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기에,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업 변경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도 추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업의 조기 발주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절차 가이드라인」 마련(2017년 9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도시로 성장하게 됐어요

Q 기업의 투자예정 부지에 속해 있는 도로 철거 문제,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익산시에 쌀 가공식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A식품은 산업용지 전환 비용 부담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장기간 소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익산시는 적극적으로 시의회 등을 설득하여 '선 지원, 후 개발계획 변경' 정책 및 지역특화산업 승인으로 글로벌 식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총 4,400억 원) 및 고용 창출(690명)로 종합식품단지로서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 기업·도·시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회 설득(2016년 7월)
전라북도,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2017년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챌린지파크 유치에 성공했어요

Q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요?

여수시는 해양관광도시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 했으나, 수산보호자원구역에 묶여 관광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광단지 후보지에 대한
수산보호자원구역을 해제하고, **기업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으로 **투자유치(2,200억원)**와 **일자리 창출(약 700명)**이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승인(2017년 8월)
전라남도,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2017년 9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G밸리 지식산업 단지에 주거시설 신축했어요

Q 젊은 근로자들이 많은 금천구 G밸리, 주거시설 신축이 어렵다고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천구는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 용적률 완화와
오피스텔 설치 규정 신설을 서울시와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에 전무했던 기숙사를 총 974호 신축했습니다.
야간 공동화 현상, 출퇴근 교통수요 유발 등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16년 3월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7년 10월 시행)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관광단지 투자유치, 유휴부지 매각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유치에 성공했어요

Q 투자자의 사업신청 내용이 기존의 계획과 다르면 돌려보내야 하나요?

외국 투자기업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아쿠아월드를 조성하려 했으나, 기존 사업협약 내용과 달라
사업 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협약체결 기관 간 중재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아쿠아리움과 휴양 콘도미니엄 건립 등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300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산광역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계획 관련 지형도면 고시 개정(2017년 12월)

[부산광역시]

용두산공원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했어요

Q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오는 용두산공원에 일반음식점이 없네요.

부산광역시는 용두산공원 내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계획했지만,
10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관계부처에 '공원 내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반영되었고, 민간사업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용 관광객이 413% 증가(357,000명)하고, 일자리도 217% 증가(27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7년 10월 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 영업 허용됐어요

Q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대표 관광지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이 어려운가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식품접객업소들은 옥외영업 허용을 원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옥외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성유원지 및 관광호텔 일대에 옥외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옥외영업 운영 업소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변경(2017년 8월)

[강원도 강릉시]

첨단 사물인터넷 거리 조성했어요

Q 사용하지 않는 유휴 철도부지,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강릉시는 사용하지 않는 철도부지를 첨단 사물인터넷(IoT) 거리로 활용하려 했으나,
전통시장이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의 개별면담과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철도 유휴부지 매각이 전격 허용**되었습니다.
영세한 지역상인의 권익 보호, 그리고 **관광객 유치**와
고용 파급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해당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 폐지 및 매각(2017년 12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대상 확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혁신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 혁신으로 주민 불편 해소했어요

Q 인접한 타 시·도 종량제봉투 구매가 가능해졌어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은 인접한 경북 경산시의 ○○마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동일한 시·도에 한해서만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매가 가능했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지역제한 규제개선'을 추진, **타 시·도 주민들이 슈퍼마켓에서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인접한 타 시·도 주민의 종량제봉투 구입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7년 11월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 관리로 공용 관리비 절감해요

Q 인접한 작은 아파트 단지, 통합 관리로 연간 공용관리비 절감하면 어떨까요?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단지 중간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어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동관리 적용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통행의 편리성·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지자체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공용관리비를 절감하고, **인접단지 간 하자보수 요청 등 공동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10월 시행)

[경상북도 안동시]

건축 복합민원 절차를 단축했어요

Q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비용과 시간 낭비 줄이면 어떨까요?

2015년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축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 상황도 늘었습니다.

안동시는 건축과·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신속한 건축허가로 연2.3억원의 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건축 복합민원 절차」 개선(2017년 7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힘

규제혁신

행정안전부